

# 광주시, 공공요금 10종 인상 내년 이후 검토

### 상하수도·도시가스· 시내버스·택시요금 등 강기정 시장 '고유가·고물가 민생 100일 대책' 첫 결재

광주시가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내년 이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1일 취임식 직후 첫 결재로 '고유가·고물가 민생 100일 대책' 추진안에 서명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 물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257억원을 투입해 공공물가 억제,

경제 안전망 강화, 소비 촉진 등 3대 분야 9개 과제를 추진해 810억원 규모 재정 집행 효과를 거두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광주시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시내버스, 택시 등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공공요금 10종 조정·인상은 2023년 이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1곳씩 늘려 지역 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차량 카풀제 활성화, 결혼·

장래 간소화를 통한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 등 착한 소비 운동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게는 500억원 규모 특례 보증을 시행하며, 경력 단절 여성, 장기 실업자 등을 새로 채용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3개월간 1명당 월 50만원 인건비를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 사회 보험료 지원은 30%에서 50%로, 노란 우산 장려금 지원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린다. 최근 예산 소진으로 중단된 광주 상생카드 활용은 예산 확보 후 오는 10월까지 재개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이날 첫 결재 직후 간부공무원과 상견례를 겸해 지역 민생안정대책을 위한 현안토론회

를 진행했다. 강 시장은 "물가, 유가, 금리의 상승고에 처해있는 시민에게 정부정책에만 의존하지 않는 광주만의 맞춤형 물가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민생 100일 대책은 물가안정, 경영안정, 경제유지가 핵심"이라며 "일자리경제실장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민생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활성화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대중교통 활성화, 취약계층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송 부분 등의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광주시, 5~20일 추가 모집

광주시는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대상을 5일부터 2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개별 사업장당 방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최대 5억6000만원, 공동방지시설의 경우는 7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하남산단을 제외한 광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업종 1~5종 사업장으로, 10년 이상된 노후 방지시설과 2020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교체 또는 신설하는 사업장이다. 하남산단 내 사업장은 '사업장 단위'로 추진하지 않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 단위 대기질 개선 사업'으로 별도 집중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20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을지연습 대비 드론운용단 경진대회 2일 광주시는 북구 드론공원 일대에서 드론운용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드론운용단 교육 및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을지연습이 실제훈련 등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대비차원에서 마련됐다.

### 광주 테크노파크, 규정 어기고 원장 운전원 뒤편 적발

광주 테크노파크가 규정을 어기고 원장 전용 차량 운전원을 둔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3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2020년 9월 공공기관 공용차량 이용 규정 표준안을 만들어 산하기관 자체 규정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표준안은 공용 차량이나 전담 운전원을 기관장 등 임원전용으로 배정해 사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필요하면 시장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테크노파크 업무 담당자는 2020년 12월 부하직원이 이런 내용으로 차량 관리 지침 개정안을 작성해 결재를 올리자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테크노파크는 2021년 3월부터 1년간 용역 업체로부터 파견자를 받아 원장 전용 공용차량 운전원

로 근무하게 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를 상급 기관 지시 불이행으로 보고 업무 담당자를 문책하도록 테크노파크에 요구했다. 이 직원은 다른 시도 테크노파크와 비교하다보니 지침 개정지 지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크노파크는 2017년에도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적을 받았으나, 경조비를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고 지역 외 유관기관 임직원, 교수 등에게 축부의금, 화환 등을 보내 지적받기도 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직원 호봉 재확정, 신규채용자 경력 산정, 인사 관련 정비, 직원 채용 공고 조건 등에서도 문제를 발견하고 모두 18명에 대해 문책,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김영록 지사, 휴일에도 반도체 열공

한국전자기술연 본부장 등 간담회 김영록 전남지사가 휴일에도, 반도체 전문가들과 만나 전남지역에서의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반도체 공부에 열공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무안군 삼향읍 한 식당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김동순 본부장, 전남테크노파크 김상태 정책기획단장과 간담회를 갖고 국내 반도체 산업 및 기업 동향,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귀를 기울였다. 김 본부장의 경우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한 에타 사업을 수행하는가 하면, 제 16회 반도체 설계 대전에서 대통령상(2015년)을 받은 반도체 전문가다.

김 단장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정보통신·소재부품 분야 기획·평가 업무를 맡았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기획단장을 맡고 있다. 김 지사는 앞서, 국민의 힘 주도로 출범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 지사는 당시 "범을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직접 들어가야 한다는 심정으로 여당의 반도체 특위 자문위원으로 들어갔다"며 "앞으로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또 "광주-전남 상승 발전을 위한 1호 사업으로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민선 8기 취임사를 통해 강조했다. /김지음 기자 dok2000@kwangju.co.kr

###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사업 전남도, 11개 선정 37억 확보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남도가 '전남 해안선 마을 관광자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11개 사업에 선정돼 국비 37억원을 확보했다.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은 데이터 기술이 필요한 행정·공공기관과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연결해 공공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일반에 개방하는 사업이다. 전남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전남 관광플랫폼의 음식 관광정보 확대를 위한 음식점 정보 구축 ▲전남관광재단의 전남 해안선 마을 관광자원 정보 구축 등이다. 순천시도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기 회복을 위한 공간 활용 인프라 정보 구축 및 품질 정비를, 광양시는 통합 트래킹 정보구축과 데이터 개방을 진행한다. 곡성군은 교통행정 효율화를 위한 도로기반 및 스마트 시설물 정보 구축 및 개방을 하고, 보성군은 차 문화 확산을 위한 보성 녹차 정보 구축 및 개방 등을 추진한다. 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며 기관별로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업은 청년인턴 13명을 직접 채용한다. 전남도는 사업을 통해 구축한 공공데이터를 도민 누구나 활용하도록 품질검사를 한 후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개방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순천·화순 등 전남 6개 시·군 축산악취개선 기반 조성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축산악취개선 공모에서 전남도내 6개 시·군이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 157억원을 확보했다. 축산악취개선 공모는 축산농가에 필요한 퇴비사와 액비저장조, 정화방류시설, 액비순환시스템, 악취저감시설, 축분 급속발효시설, 가축분뇨 처리용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시·군을 평가해 선정하는 전국 공모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시군당 30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번 선정된 시군 중 영광, 해남, 영암 3개 군은 우선 사업자로 뽑혀 사업비 90억원을 지원받는다. 예비 사업자로 선정된 순천, 화순, 강진 3개 시·군은 국비를 추가 확보하는 데로 67억원을 투입해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남도는 사업이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대상 농가의 인허가를 올해 안에 추진하고, 내년 시·군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모에는 전국 12개 시도 47개 시·군이 신청해 서류심사와 현장 발표평가에서 경쟁이 치열했다. 이번 성과는 전남도가 정부 평가에 대비해 지난 3월부터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작성 요령 등 설명회를 개최했고, 중앙 평가 위원들의 현장 질의 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한 점이 주요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1522-9341**